



# 우리경제의 현 좌표와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上)

“본회와 한국가금학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이 지난 10월 28일 (수)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치 못한 양계인을 위하여 발표된 내용을 본지에 게재하니 많은 참고 바란다. - 편집자주 -

## 목 차

### I.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과 경제민주화

1. 고도성장을 위한 경제개발전략
2. 안전 바탕으로 건설해진 경제체질
3.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
4.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 II. 대외개방과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1. 수입자유화 배경
2. 한·미무역관계의 변화추이 전망
3. 주요한 한·미통상현안
4.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 III. 결 론



유 덕 상  
경제기획원 사무관

### I.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과 경제민주화

우리가 지난 1962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착수한 이래 이제 겨우 4반세기가 지났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후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세계유수의 「신흥부자의 나라」, 즉 선진공업국을 넘보는 신흥공업국이 되었다.

## 1. 고도성장을 위한 경제개발전략

이렇게 단기일내에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온 국민의「잘 살아보자」는 강렬한 개발의지 때문이거나,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의 채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전략은 다섯차례에 걸친 5개년계획으로 일관성있게 뒷받침되었다.

### ① 대외지향정책의 채택

돌이켜 보면, 60년대초 우리는 다른 어느나라보다 불리한 경제개발여건에 처해 있었다. 20세기초 우리는 35년에 걸친 자랑스럽지 못한 식민통치의 유산을 갖고 있으며 해방후에도 남북분단의 고통과 6·25의 쓰라린 비극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경제성장의 여력은 고갈될 대로 고갈되었고, 60년대초까지도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거기다가 인구는 많은데 자원은 부족하고 국내시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과 해외시장의 활용이 불가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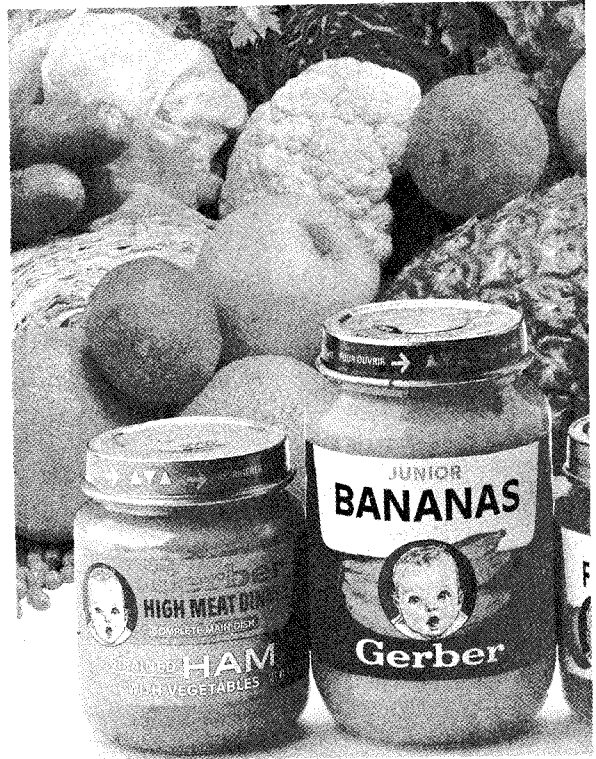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 전통가치에 따라 교육과 문화를 숭상하던 터여서 웬만한 국민이라면 까마눈이는 먼할 정도의 학력과 손재주와 근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제품을 외국시장에 수출하는 「대외지향정책」을 추수했던 바,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60년대와 70년대 전반 제1차 석유파동이 있기까지 세계적인 자유무역 분위기의 산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고도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

### ② 성장주도부문의 우선 육성

식민통치와 전제가 연속되는 가운데 국내자본의 축적은 매우 빈약하였다. 그래서 넉넉지 못한 자본을 일부 수출주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은 해외의존이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차관도입이 있는데, 우리는 차관위주의 외자도입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외채는 다소 늘었으나, 직접투자에 의한 다국적기업 확포를 방지할 수 있었다.

개발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우위를 갖고 있는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수출산업화



하였는데, 대표적인 수출산업은 섬유, 신발, 합판 등이었다.

### ③ 중화학공업화 전략

70년대 들어 주종수출산업을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였다. 70년대초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자 당장 우리의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71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게 되는데, 중화학공업 제품은 적게 수출하더라도 외화가득이 많아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을 위해 공업부문을 강조한 결과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따라서 농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70년대초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이중곡가제에 의한 농산물가격지정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다.

## 2. 안정 바탕으로 건설해진 경제체질

그런데 79년 제2차 석유파동이후 우리경제는 경제개발

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80년에는 최초로 -4.8%의 「마이너스」성장을 하여 실업율이 5.2%까지 높아졌는가 하면 국제수지도 53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물가오름세도 극도로 악화되어 도매물가가 연평균 38.9%까지 치솟고 소비자물가도 28.7%까지 오른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소생하기 위해서는 80년대들어 기존 정책기조의 일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

① 무엇보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물가오름세를 잡는 일」

만성화된 물가오름세를 진정시키지 않고는 가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의 경제생활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었던 것이다. 투기와 과소비가 물가를 자극하여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열심히 생산에 종사한 계층보다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불로소득계층이 더 잘사는 사회,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증가가 두드러진 경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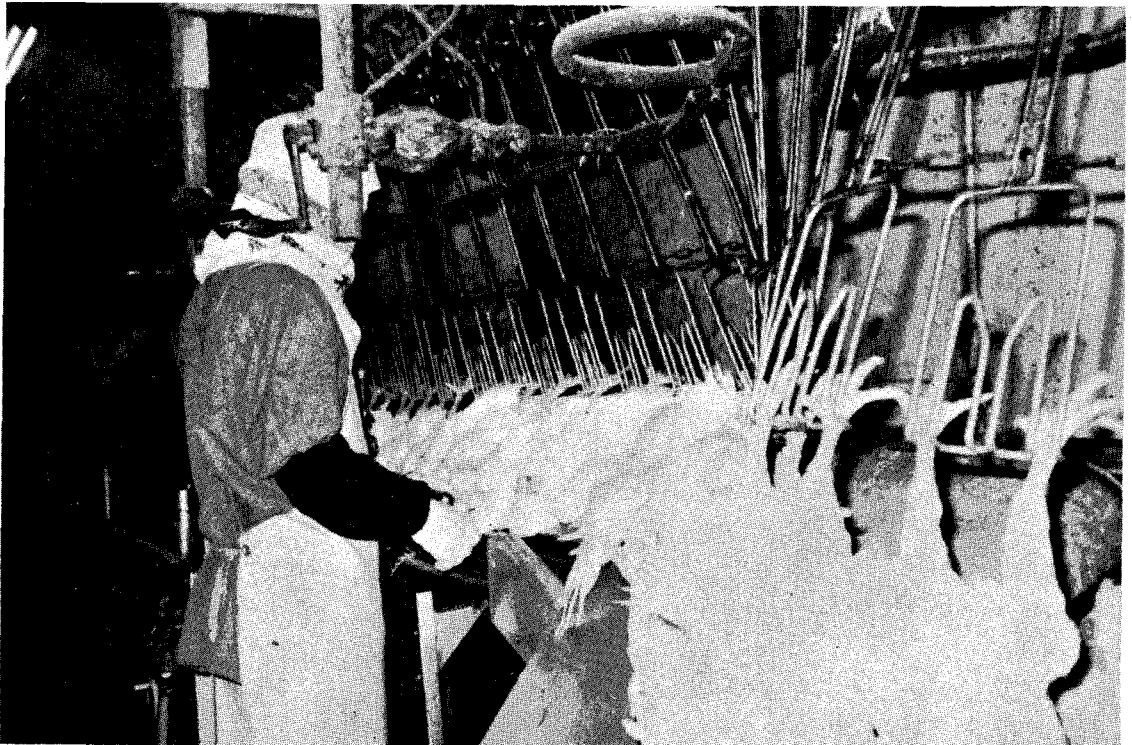
이리하여 우선 공무원 봉급동결을 비롯한 83년의 예산동결로 정부지출을 줄이고 초진축재정을 폈다. 또 물

가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통화팽창을 줄이기 위해 총통화( $M_2$ )를 70년대의 30% 수준으로부터 80년대에 19%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긴축도 폈다. 그런가 하면 만성적인 통화팽창을 유발해온 한은차입을 줄이기 위해 양특적자를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한 농산물수매가도 인상을 대폭 억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시키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었던 결과 78년 35.5%까지 상승했던 주택가격이 86년엔 상승율이 영(0)으로 안정되었다.

이러한 안정화시책들은 경제교육을 통하여 온 국민이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욕구를 자제해 나감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② 경제운용방식의 전환으로 「국제경쟁력을 기르는 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운용방식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함과 동시에,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정착과 대외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수입자유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기간동안 시중은행의 민영화 사전가결승인제의 폐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자율화를 위해 경영평가제도입 등 수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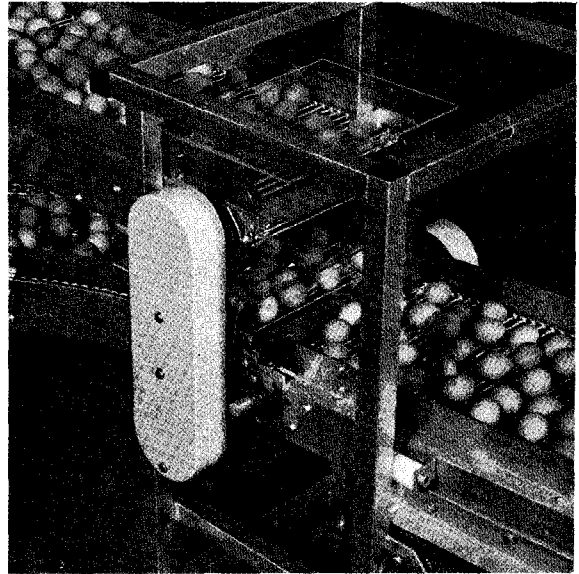


질향상, 원가절감, 신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개발(R&D)투자를 80년 3,000억원 수준에서 86년 16,500억원 수준으로 5.5배나 확대하였다.

③ 국민복지대책의 추진으로 「성장과실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일」

국민복지증진의 1차적인 요건은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일이다. 5차계획기간중(1982~86년)연평균 8.6%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업율은 4%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70년대 후반 악화되던 소득분배구조가 80년대 들어서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물가안정세로 인하여 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이년평균7% 수준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6년동안 전체 예산규모가 2.1배 늘어난데 반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예산은 같은 기간동안 3.6배 늘어날 정도로 재정지원을 강화하였다.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 의료보험확대, 생활편익시설 확충에 주력하였다. 특히 전화공급능력 확대로 전화적체현상이 없어지고 도로포장율이 높아져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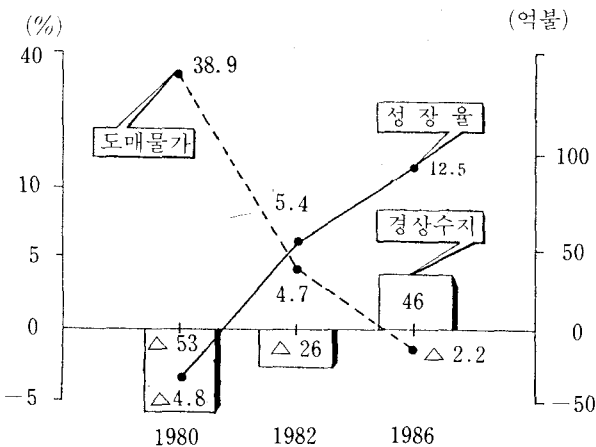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도 도시영세민, 농어민, 근로자 등 상대적 소외되어 왔던 사회계층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게 사실이다.



3. 국제수지 흑자시대 개막

80년대 후반 우리 경제는 이와 같이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튼튼해진 체질강화에 힘입어 성장활력을 회복하였다. 80년 이래 가장 큰 짐이 되었던 물가상승은 연 5년째 3% 이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년평균 8.6%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그리하여 86년에 사상 처음으로 46억불에 달하는 국제수지흑자를 이룩해서 투자재원의 해외 의존없이 자체조달이 가능한 「자력성장시대」가 열리고 있다.

(1980~86년간 경제실적)



① 국제수지 흑자전환 추세전망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최근 흑자전환이 앞으로로도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대응을 잘해서라기 보다 소위 「3저요인」등 외부여건이 좋아서 그리 되었다는 자기비하의 감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국제수지흑자는 3저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 산업체질의 강화로 국제 경쟁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며, 산업체질강화는 80년대 전반에 줄곧 우리가 구조조정노력을 한 결실인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수지 흑자전환은 일시적,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자생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이다.

② 국제수지 흑자전환의 경제정책적 의미

국제수지흑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투자

재원의 자력조달로 외채감축과 정책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등 긍정적 측면이다.

또 다른 측면은 일시에 과도하게 흑자가 생길 경우 해외부문의 통화증발로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낙관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과소비풍조가 생기는 등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흑자가 늘어나는 만큼 시장개방압력 등 통상압력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도 흑자전환을 계기로 국민의 복지증진 욕구가 비등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전환기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을 하나 하나 점검해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흑자기조하의 성장호조가 지속되도록 물가안정과 통상마찰 완화에 주력하면서 정치발전과정에서 표출될 것으로 보이는 각계의 균형발전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 4.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지금 우리 사회는 「6.29宣言」이후 민주화 열기가 증만해 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경제쪽에서도 노사분규가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제각기 더 희생해 왔고 더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몫을 찾아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산업화과정에서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 할 전환기적 진통이라 하겠다.

##### ① 정치사회발전 토대가 되는 경제적 기반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지난 80년초와 같이 우리 경제가 한참 어려웠던 때에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는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각계각층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매우 튼튼하게 다져졌고, 이러한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에 비록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과 수출에 많은 차질이 생겼어도 이를 비교적 잘 견디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토대를 바탕으로 민주화의 거센 물결을 잘 수습해서 산업평화 정착시키는 것이 나라발전의 열쇠라고 생각된다.

##### ② 균형발전문제의 대두배경

그동안 고도성장을 위한 성장과실의 증대에 따라 각계의 기대욕구가 점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5년간 우리 경제 년평균 8.3%의 성장율을 보였으며, 그 결과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국제수지흑자 등과 같은 성장과실이 눈에 띄게 커졌다. 8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296불에 이르게 되자, 국민들은 3,000불 시대에 걸맞는 형평분배와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최근 정치민주화의 열기가 증만해지면서 노사문제, 계층간·노동간 격차문제, 재벌비대화문제의 해결과 같은 사회적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경제민주화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 ③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응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를 바탕으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기회전등의 사회여건조성이 관건이다.

1차적으로는 사회 각계층 각부문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활력의 지속이 기본이다. 성장이 없는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으며, 안정없는 근로자, 봉급생활자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계열기업 확장,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부당거래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농공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91년까지 180개 지구가 넘도록 할 것이다.

2차적으로는 이미 생긴 불균형을 시정하는 사후적 보완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88년에 시작되는 농어촌의료보험 확대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국민연금제 실시 등 3대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여 나갈 것이며,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생활보호 직업훈련은 물론 가난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녀학비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특히 노사문제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한 자율적 결정에 맡기되, 정부는 저임금해소와 직종간·학력간 임금격차를 융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종업원지주제 등을 확산하여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임대아파트 건립 등 근로자복지증진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계속>